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2월 16일 금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03면	시도의회의장협 임시회	1
江原日報	02면	“균형 발전 위해 춘천~홍천 국도 확장 시급”	1
G1방송	온라인	시도의장협, 국도 5호선 춘천~홍천 확장 건의 가결	2
KBS 춘천	온라인	시도의장협, 국도 5호선 춘천-홍천 확장 건의	3
강원도민일보	21면	"동계올림픽 유산 가치 제고, 비인기 종목 활성화 기대"	4
KBS 춘천	온라인	강원도, 2028년까지 전국동계체전 단독 개최	4
江原日報	02면	강원자치도, 2028년까지 동계체전 단독 개최	5
연합뉴스		"공유재산은 도민들 재산"...강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6
스포츠서울	온라인	강정호 강원자치도의원 대표발의, ‘강원자치도 공유재산 관...	7
스포츠서울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8
중부뉴스통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세대 보훈교육 활성화 나선다	9
세계타임즈	온라인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퇴직교직원 교육지원 조례안’ ...	10
동방일보	10면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퇴직교직원 교육지원 조례안’...	10
신아일보	온라인	김용래 강원도의원, ‘퇴직교직원 교육지원 조례안’ 발의	11
뉴스투나잇	온라인	강원도의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 “해빙기 안전사고 주의...	12
성남신문	온라인	강원도의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 “해빙기 안전사고 주의...	13
연합뉴스		강원 차량 화재 증가세...5년간 총 1천176건 발생	14
로컬경기	온라인	강원도의회 양숙희의원, 소방본부 업무보고 “차량용 소화...	15
철원신문	온라인	엄기호 도의원, 철원이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의 최적지!	16
스포츠서울	온라인	엄기호 강원자치도의원 “철원이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의 ...	17
강원도민일보	16면	[국제스케이트장 철원 유치 결의] 김정수·엄기호 도의원	18
전국지방자치뉴스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도교육청 친환경 학교운동장 조성...	19
시사일보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도교육청 친환경 학교운동장 조성...	20
江原日報	03면	자치도의회 ‘일·생활균형 지원 조례’ 제정	21
스포츠서울	온라인	원미희 강원자치도의원, 강원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	22
이뉴스투데이	온라인	'강원 고교 현장실습 운영·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23
이코노믹포	온라인	강원도의회 "이승진 의원,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24

강원도민일보	02면	도내 '위기 임신부' 안전한 출산 기반 마련	25
 전국 지방자치뉴스	온라인	임미선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26
문화매일	온라인	조성운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기관 내 화장실 불법촬영...	27
신한뉴스	온라인	조성운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기관 내 화장실 불법촬영...	28
강원종합뉴	온라인	[정치 이한영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 업무보고 받...	29
강원도민일보	15면	영월군의회 의정활동비 공청회 '인상 가닥'	30
강원도민일보	10면	춘천시의회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 상향 확정	30
江原日報	21면	영월군의회 의정활동비 40만원 인상 전망	31
江原日報	22면	화천군 외국인 근로자 343명 투입	31
江原日報	17면	횡성지역 건설업체 활로 모색	32
강원도민일보	17면	고성주민 민통선 영농지 출입 불편 대책 촉구	32
강원도민일보	04면	늘봄교실 운영 코앞인데... 기간제 교사 미충원 불만 속출	33
江原日報	02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마련 ... 새 국회 1호 법안 노린다	33
강원도민일보	10면	춘천시 강촌 지역특화재생 옛 명성 되찾는다	34
江原日報	20면	태백시 '일자리·인구 절벽' 가속화	34
江原日報	05면	‘24cm 폭설’ 도로 항공편 마비·교통사고	35
강원도민일보	01면	봄 날씨 하루만에 폭설 ... 진부령 27.4cm·속초 1.9cm	3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외국인 정주 정책 고민할 때	36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역대급 임금체불, 노동자 희생 안돼	37
江原日報	25면	[사설] 이사철 전세난 우려, 근본 대책 마련돼야 한다	38
江原日報	25면	[사설] ‘道 한국은행 춘천 유치전’ 첨예하게 이슈화해야	39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16일 (금)

종합 03면



시도의회위원장협 임시회 대한민국시도의회위원장협의회가 15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2024년 제1차 임시회를 열고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안한 ‘국도 5호선 춘천~홍천 확장 및 춘천 서면~신북 우회도로 개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등을 가결했다.

사진제공=강원도의회

江原日報

2024년 02월 16일 (금)

종합 02면

“균형 발전 위해 춘천~홍천 국도 확장 시급”

전국시도의회장協 ‘서면~신북 우회도로 촉구 건의안’ 가결

대한민국시도의회위원장협의회가 정부의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국도 5호선 춘천~홍천 구간’, ‘춘천 서면~신북 우회도로’가 반영되도록 힘을 보탠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이 제안한 ‘국도 5호선 춘천~홍천 확장 및 서면~신북 우회도로 개설 반영 촉구 건의안’이 15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위원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임시회에서 원

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년)을 앞두고 지역 주민의 교통 이용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해당 도로 확장과 개설 필요성을 알리는 내용을 담았다.

도의회는 국도 5호선 춘천~홍천 확장 구간이 제3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11~2015년)에 포함돼 시설계획까지 진행했지만, 제4차와 제

5차 계획에서 제외됐으며, 향후 도청 이전 시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권혁열 도의장은 “춘천~홍천 구간과 서면~신북 우회도로는 강원과 충청·경상을 잇는 강원 영서권의 핵심 도로이자 강원북부권역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순환형 네트워크의 핵심 도로”라며 “영서·접경지역 주민들의 교통 이용 불편 해소와 물류 비용 감소를 위해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현안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현정기자

G1방송

2024년 02월 15일 (목)

강원

시도의장협, 국도 5호선 춘천~홍천 확장 건의 가결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임시회가 오늘(15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원자치도의회 권혁열 의장이 제안한,

'국도 5호선 춘천에서 홍천 확장 및 서면에서 신북 우회도로 개설 반영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KBS 춘천

2024년 02월 15일 (목)

강원

시도의장협, 국도 5호선 춘천-홍천 확장 건의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오늘(15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이 제안한 '국도 5호선 춘천-홍천 확장과 서면-신북 간 우회도로 개설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국도 5호선 가운데 유일한 2차선 구간인 춘천-홍천 구간과 서면-신북 간 우회도로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고순정 flyhigh@kbs.co.kr

명성일보, 더코리아 등 48개 언론사 보도

2024년 02월 16일 (금)

강원도민일보

스포츠 21면

“동계올림픽 유산 가치 제고, 비인기 종목 활성화 기대”

5년간 전국동계체육대회 강원 단독 개최
도-대한체육회-유관기관 업무 협약
대회 성공 협력 강화·자금 지원 논의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한체육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가 향후 5년간 강원지역에서 열리는 전국동계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손잡았다.

도는 15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김진태 도지사와 권혁열 도의회 의장, 신경호도 교육감, 윤성욱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양희구 도체육회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동계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11월도가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단독 유치신청에 성공하면서 대한체육회가 대회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제시하며 마련됐다. 기관들은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5년간 강원을 주개최지로 전종목 개최 △대회운영 위한 국고·지방비 도체육회에 지원 △대회발전을 위한



‘전국동계체육대회 강원특별자치도 개최 업무협약식’이 15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렸다. 사진제공=강원특별자치도청

상호협력 등을 추진, 성공개최를 위한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도와 대한체육회는 전국동계체육대회의 강원 개최를 위해 각각 1억원, 2억 8000만원을 준비자금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동안 전국동계체육대회는 대한체육회에서 모든 집행을 맡았지만 올해부터는 강원도에 일임했고, 이에 맞춰 도체육회에서 TF팀을 만들어 움직일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는 동계스포츠의 메카라는 공식이 이번

협약식으로 더욱 확실하게 다져질 것”이라며 “특히 올해부터 5년간 단독개최로 동계체전의 위상을 높이고 올림픽 경기장 본연의 가치가 발현될 수 있도록 유산 활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희구 도체육회장은 “그동안 분산 개최됐던 동계체전이 올해부터 강원지역에서 단독 개최되면서 비인기 종목들도 활성화 시켜 단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이번 집중개최를 기점으로 도내에 국제빙상장을 유치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정호

KBS 춘천

2024년 02월 15일 (목)

강원

강원도, 2028년까지 전국동계체전 단독 개최



앞으로 5년 동안 전국동계체육대회가 강원도에서만 열립니다.

강원도는 오늘(15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대한체육회, 강원도체육회 등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국동계체육대회 강원 단독 개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전국동계체전의 모든 종목을 단독 개최합니다.

올해 동계체전은 이달(2월) 22일부터 25일까지 평창 등에서 열립니다.

김영준 ykim1@kbs.co.kr

江原日報

2024년 02월 16일 (금)

종합 02면



◇전국동계체육대회 강원특별자치도 개최 업무협약식이 15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려 신경호 도교육감(왼쪽부터), 김진태 도지사, 윤성욱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권혁열 도의장, 양희구 강원자치도체육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동계체육대회는 향후 5년간 도내에서 개최하게 된다.

박승선기자 lyano@

강원자치도, 2028년까지 동계체전 단독 개최

5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도, 강원2024 주역 표창 계획

속보=강원특별자치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대한체육회, 도체육회는 15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전국동계체육대회 강원자치도 단독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본보 14일자 2면 보도)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윤성욱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양희구 도

체육회장, 도내 시·군 체육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5년간 동계체전 전 종목을 도내에서 개최하게 되며, 도교육청은 학생선수 참가 지원과 대회 홍보에 협력한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자치도는 동계스포츠의 메카라는 공식이 이번 협약식으로 확실하게 다져질 것”이라며 “그동안 동계체전은 분산 개최로 집중력이 분산됐는데 단독 개최로 동계체전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진태 지사는 15일 도청에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 개최와 흥행에 크게 기여한 대한체육회와 대한민국 선수단 관계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도는 성공개최 주역 400명을 선정해 유공자 표창을 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날 대한체육회(회장:이기흥)와 이혁렬 대한민국 선수단장, 이태영 부단장, 홍우택 대한체육회 국제대회부장, 배성욱 지역체육부 과장, 유고는 국제교류부 대리, 최선규 대리, 김효은 국제대회부 주무 등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권순찬·최기영기자

"공유재산은 도민들 재산"...강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강정호 도의원, 사업 부서 소관 상임위에 사전 설명 규정 추가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속초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체계가 더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방향으로 바뀐다.

국민의힘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속초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관리계획 의회 제출 및 심사와는 별도로 업무주관 재산관리관의 소관 상임위 사전 설명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 부서인 회계과에서 작성하고, 소관 상임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실질적인 사업추진 부서 소관 상임위에서 업무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재산의 취득·변경과 관련한 사전 인지 수단과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냈다.

조례가 개정되면 업무주관 상임위와 계획심사 상임위 간 의견 교류와 협의를 통해 내실 있고 객관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가 이뤄짐은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방지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공유재산은 도민들의 재산인 만큼 내실 있고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공유재산의 취득·변경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도 강화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책임 있고 투명한 업무추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conanys@yna.co.kr

2024년 02월 15일 (목)

스포츠서울

사회

강정호 강원자치도의원 대표발의, ‘강원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원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체계 확 바뀐다!

강 의원 “공유재산은 도민들의 재산만큼 내실 있고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인 심사에 기여할 필요성 인정”



강정호 의원. 사진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스포츠서울 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강정호 의원(속초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인 회계과에서 작성되고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추진 부서 소관 상임위의 업무 파악에 어려움이 있기에, 실질적인 사업추진 부서 소관 상임위의 해당 재산의 취득 및 변경에 대한 사전 인지 수단 및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총괄재산관리관의 관리계획 의회 제출 및 심사와는 별도로, 업무주관 재산관리관의 소관 상임위 사전 설명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상임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업무주관 상임위와 계획심사 상임위 간의 의견 교류 및 협의를 통해 내실 있고 객관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정호 의원은 “공유재산의 관리는 공유재산의 용도와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가 개별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행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회계과 업무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만 보고되어 업무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본 조례가 공유재산의 취득·변경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책임 있고 투명한 업무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23일 제 32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acdck4021@sportsseoul.com

미디어이슈, 신한뉴스 등 32개 언론사 보도

2024년 02월 15일 (목)

스포츠서울

전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통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세대 보훈교육 활성화 나선다



[스포츠서울 | 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월 15일(수) 제32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동해2)이 발의한 조례안은 미래세대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에 대한 학교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우선 보훈교육을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교육감이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이의 실행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그 밖에 보훈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을 규정하고 있다.

김기하 의원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보훈의식 함양을 위해 학교 보훈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2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acdcok4021@sportsseoul.com

2024년 02월 15일 (목)

지역

중부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세대 보훈교육 활성화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통과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 강원도의회청사전경(사진=강원도의회)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월 15일 제32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미래세대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에 대한 학교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우선 보훈교육을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교육감이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이의 실행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그 밖에 보훈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을 규정하고 있다.

김기하 의원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보훈의식 함양을 위해 학교 보훈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2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본회의의 심의·의결 거쳐 공포하게 된다.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누리일보, 문화매일 등 30개 언론사 보도

2024년 02월 15일 (목)

지역

세계타임즈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의원, '퇴직교직원 교육 지원 조례안' 발의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김용래 도의원(강릉3)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학교현장과 지역사회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 16일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본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쌓은 퇴직교직원들이 퇴직 후에도 학생교육, 평생교육, 진로교육 등을 지원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고령인구 비중은 23.3%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고 고령화는 가속화 될 전망이어서 장년층이 지속적으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에 조례안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래 도의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다. 이번 조례안으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년층 인력에게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고, 자치단체나 교육현장에서는 학교 방과후 활동, 돌봄, 상담 등의 분야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1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024년 02월 16일 (금)

지역 10면

동방일보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의원, '퇴직교직원 교육지원 조례안' 발의

퇴직교직원의 사회 활동 지원 및 지역 사회 보충 인력 확충 인프라 마련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김용래 도의원(강릉3)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학교현장과 지역사회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 16일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본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쌓은 퇴직교직원들이 퇴직 후에도 학생교육, 평생교육, 진로교육 등을 지원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고령인구 비중은 23.3%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고 고령화는 가속화 될 전망이어서 장년층이 지속적으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에 조례안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래 도의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다. 이번 조례안으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년층 인력에게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자치단체나 교육현장에서는 학교 방과후 활동, 돌봄, 상담 등의 분야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1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노도경 기자 dongbangmedia@naver.com

2024년 02월 15일 (목)

신아일보

지역

김용래 강원도의원, '퇴직교직원 교육지원 조례안' 발의

조덕경 기자

퇴직교직원의 사회 활동 지원 및 지역 사회 보충 인력 확충 인프라 마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래 도의원(강릉3)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학교현장과 지역사회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 16일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래 의원(강릉3)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학교현장과 지역사회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 16일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본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쌓은 퇴직교직원들이 퇴직 후에도 학생교육, 평생교육, 진로교육 등을 지원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고령인구 비중은 23.3%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고 고령화는 가속화 될 전망이어서 장년층이 지속적으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에 조례안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래 도의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다. 이번 조례안으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년층 인력에게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고, 자치단체나 교육현장에서는 학교 방과후 활동, 돌봄, 상담 등의 분야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1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

문화매일, 뉴스쑈 등 33개 언론사 보도

2024년 02월 15일 (목)

뉴스투나잇

강원

강원도의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 “해빙기
안전사고 주의 및 대책 촉구”

김태형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춘천3,국민의힘)

[뉴스투나잇=김태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춘천3,국민의힘)은 24년 강원소방본부 첫 업무보고에서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위원장은 “최근 기온 상승에 따른 지반 약화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빙기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강원소방본부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낙석 발생 가능 지역이나 낙석 주의 표지판이 있는 곳 우회 ▲건축물 주변 웅벽·축대 균열 확인 ▲얼음 위 놀이·낙시 금지 ▲산행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소지 ▲위험요인 발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119신고 ▲결빙 지역 등 출입 금지 지역 진입 및 취사·음주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소방본부의 해빙기 안전사고 최근 5년간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기간인 2020년을 제외하고 평균 70여 건의 신고접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낙상(122건) '도로결빙(70건) ' 낙석·낙빙(54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는 영동(181건)이 영서(70건)보다 2배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해빙기 현장출동은 붕괴·도괴(219건) ' 낙석·낙빙(18건) ' 수난사고(12건) 순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영동지역은 강풍으로 인한 구조물 도괴 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박위원장은 “해빙기(2~4월)엔 얼었던 지표면이 녹아 균열·지반 침식이 발생하기 쉽고 각종 시설물·구조물 등의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집행부에 선제적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24년 02월 15일 (목)

성남신문

전국

강원도의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 “해빙기 안전사고 주의 및 대책 촉구”

성남신문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춘천3,국민의힘)

[성남신문=성남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춘천3,국민의힘)은 24년 강원소방본부 첫 업무보고에서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위원장은 “최근 기온 상승에 따른 지반 약화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빙기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강원소방본부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낙석 발생 가능 지역이나 낙석 주의 표지판이 있는 곳 우회 ▲건축물 주변 옹벽·축대 균열 확인 ▲얼음 위 놀이·뉘시 금지 ▲산행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소지 ▲위험요인 발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119신고 ▲결빙 지역 등 출입 금지 지역 진입 및 취사·음주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소방본부의 해빙기 안전사고 최근 5년간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기간인 2020년을 제외하고 평균 70여 건의 신고접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낙상(122건) '도로결빙(70건) ' 낙석·낙빙(54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는 영동(181건)이 영서(70건)보다 2배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해빙기 현장출동은 붕괴·도괴(219건) ' 낙석·낙빙(18건) ' 수난사고(12건) 순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영동지역은 강풍으로 인한 구조물 도괴 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박위원장은 “해빙기(2~4월)엔 얼었던 지표면이 녹아 균열·지반 침식이 발생하기 쉽고 각종 시설물·구조물 등의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집행부에 선제적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뉴스중, 정도일보 등 33개 언론사 보도



2024년 02월 15일 (목)

종합

강원 차량 화재 증가세...5년간 총 1천176건 발생

양숙희 도의원 "소화기 의무 설치 홍보 대책 마련해야"



승용차 화재 진화

[독자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올 연말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승용차에서 5인 이상 승용차로 확대되는 가운데 강원도에서 매년 200건이 넘는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의힘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의원(춘천6)이 강원도소방본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차량 화재 현황 자료를 보면 총 화재 건수는 1천176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11건, 2020년 231건, 2021년 234건, 2022년 232건, 2023년 26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시군별로는 원주(206건), 강릉(154건), 춘천(148건) 등 3개 도시에서 절반 가까이 발생했다.

이에 양 의원은 오는 16일 강원소방의 올해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관련 홍보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며,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해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로컬경기

2024년 02월 15일 (목)

인천/경기

강원도의의회 양숙희의원, 소방본부 업무보고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홍보대책 마련 촉구”

로컬경기



▲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의원(안전건설위, 춘천6)

[로컬경기=로컬경기]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의원(안전건설위, 춘천6)은 2월 16일, 강원소방본부 첫 업무보고에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관련 홍보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양의원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차량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적용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된다”면서 “아직까지는 권고사항이나 올해 12월부터 의무사항으로 바뀌어 위반시 벌금 등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고 밝힌다.

또한 양의원원은 “최근 5년간 강원지역의 차량화재 건수가 1,176건으로 21년 234건, 22년 232건, 23년 268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고,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며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하여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소방본부에 차량용 소화기 관련 홍보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누리일보, 미디어타임즈 등 31개 언론사 보도

2024년 02월 15일 (목)

철원신문

자치의정

엄기호 도의원, 철원이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의 최적지!

국제 스케이트장 철원 유치 필요성 역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철원2)은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월 14일)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제 스케이트장 철원 유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엄기호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강원특별자치도 3개 시군을 비롯한 7곳의 지자체에서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춘천과 원주 등이 유치 신청을 하고 있으나, 춘천과 원주의 경우 각각 첨단 산업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의 성공을 기원하는 바이나, 국제 스케이트장의 경우 각종 규제와 발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접경지역 철원이 유치하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철원의 경우 스케이트장 유치에 나선 지자체 중 주민들의 유치 열기가 가장 높다고 말하고 이는 과거 철원에서 열렸던 각종 빙상대회에 대한 주민들의 추억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엄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을 향해서는 전국 최고의 흑한지역인 철원에서 강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빙상 대회를 개최해 학생들의 동계 체육에 대한 열기를 높이고 체력 증진의 기회를 삼아 주길 주문했다.

관리자 (korea78123@hanmail.net)

스포츠서울

2024년 02월 15일 (목)

사회

엄기호 강원자치도의원 “철원이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의 최적지”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국제 스케이트장 철원 유치 필요성 역설



엄기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사진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스포츠서울 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철원2)은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월 14일)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제 스케이트장 철원 유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엄기호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강원특별자치도 3개 시군을 비롯한 7곳의 지자체에서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춘천과 원주 등이 유치 신청을 하고 있으나, 춘천과 원주의 경우 각각 첨단 산업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의 성공을 기원하는 바이나, 국제 스케이트장의 경우 각종 규제로 발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접경지역 철원이 유치하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철원의 경우 스케이트장 유치에 나선 지자체 중 주민들의 유치 열기가 가장 높다고 말하고 이는 과거 철원에서 열렸던 각종 빙상대회에 대한 주민들의 추억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엄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을 향해서는 전국 최고의 흑한지역인 철원에서 강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빙상 대회를 개최해 학생들의 동계 체육에 대한 열기를 높이고 체력 증진의 기회를 삼아 주길 주문했다.

acdck4021@sportsseoul.com

철원뉴스, 일간투데이 등 49개 언론사 보도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16일 (금)

지역 16면



김정수·엄기호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엄기호 도의원은 최근 도의회에서 철원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위원회와 함께 스케이트장 철원 유치 캠페인을 벌였다.

2024년 02월 15일 (목)

전국 지방자치 뉴스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위해 노력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통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월 15일 제32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 엄기호 의원(철원2)이 발의한 조례안은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증진하여 학생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이다.

조례안은 학교 운동장을 환경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감이 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의 실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엄기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각 급 학교의 운동장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체육활동 등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2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본회의의 심의·의결 거쳐 공포하게 된다.

유재호 기자 it8815@naver.com

2024년 02월 15일 (목)

시사일보

전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위해 노력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통과

전영선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시사일보=전영선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월 15일 제32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 엄기호 의원(철원2)이 발의한 조례안은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증진하여 학생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이다.

조례안은 학교 운동장을 환경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감이 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의 실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엄기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각 급 학교의 운동장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체육활동 등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2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본회의의 심의·의결 거쳐 공포하게 된다.

누리일보, 미디어이슈 등 27개 언론사 보도

江原日報

2024년 02월 16일 (금)

종합 03면

자치도의회 ‘일·생활균형 지원 조례’ 제정

강원 워라벨 최하위 오명

속보=강원특별자치도 내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워라벨) 수준이 전국 꼴찌(본보 2023년 12월28일자 1면 보도)를 기록하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원에 나섰다.

원미희(국민의힘·비례) 도의원이 발의한 ‘강원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도지사 책무 규정과 함께 직장 문화 조성 과 확산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직장 컨설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일·생활 균형 지수’에서 강원자치도는 현저히 낮은 지자체 관심 등으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날 사회문화위에서는 임미선(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발의한 ‘위기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수정 가결됐다. 이로써 경제·심리적 사유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 기획행정위에서는 강정호(국민의힘·속초) 의원이 발의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현정

스포츠서울

2024년 02월 15일 (목)

사회

원미희 강원자치도의원, 강원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전국 워라벨 지수 최하위 오명 벗어나는 계기 마련



원미희 의원. 사진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스포츠서울 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원미희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제정된 이번 조례안에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과 함께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과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014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운영해왔으나 정형화된 가족형태를 대상으로 한 일·가정 양립 지원에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해진 가족과 개인들까지 지원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지난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일·생활 균형 지수에서 강원특별자치도는 50.9점을 받아 17개 시·도 중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평가항목 중 지자체관심도에서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관련 조례와 홍보, 전담부서 부재가 주 원인으로 평가되었다.

제정조례안에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직장 컨설팅 및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미희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 14곳이 이미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일이 생활보다 중요시되었던 전통적 직장문화에서 탈피하여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acdck4021@sportsseoul.com

세계타임즈, 강원일보 등 5개 언론사 보도

2024년 02월 15일 (목)

이뉴스투데이

강원

'강원 고교 현장실습 운영·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김경석 기자

연간 5억8000만원 예산 소요 예상



이승진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김경석 기자] 강원도 내 고등학생들의 현장실습 시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제공하는 조례안이 도의회의 상임위를 통과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25회 1차 회의를 열고 이승진 도의원(춘천)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심사 끝에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현장실습 운영 기준과 계획, 학교 현장실습운영위 구성 및 운영, 현장실습 방법과 선도기업의 선정, 사전교육과 입문교육 실시, 학생 안전보장, 현장실습의 평가 및 협력체계 구축 등 현장실습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폭 넓게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도교육청 현장실습 관련 운영비와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운영비 총 5억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승진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며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직업에 대한 소양 및 능력 계발을 통해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2월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후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경석 기자 ks191212@naver.com

2024년 02월 15일 (목)

경제

이코노믹포스트

강원도의회 "이승진 의원,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석균 부장



이승진 의원.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코노믹포스트=이석균 부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이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가 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이승진 의원(춘천, 사진)은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최적의 현장실습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조례안은 △현장실습 운영기준 및 운영계획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장실습 방법 및 선도기업의 선정 △사전교육과 입문교육 실시 △학생 안전보장 △현장실습의 평가 및 협력체계 구축 등 현장실습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다.

이승진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것”이며,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직업에 대한 소양 및 능력 계발을 통해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P

lsg@economicpost.co.kr

누리일보, 정도일보 등 28개 언론사 보도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16일 (금)

종합 02면

도내 '위기 임산부' 안전한 출산 기반 마련



분권 G - 우리마을조례

(강원)

임미선 대표발의 조례 수정 가결
가정폭력 피해자·흡리스 등 대상
보호출산·출산물품 대여 등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가정폭력 피해자, 미등록 이주민 등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정부보다 한 발 빠르게 나섰다.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정재웅)는 15일 제325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고 임미선(비례·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 사회문화위는 조례명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



정했다. 이는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될 상위법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궤를 같이 하기 위해서다. 조례는 특별법과 동일하게 위기 임산부를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으로 규정했다.

임미선 의원은 이날 "미혼모한정이 아니고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이라도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며 "가정폭력의 피해자, 지적장애 임산부, 미등록 이주민, 흡리스 등 불안정 상태에 있는 다양한 임산부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위기임산부 현황 조사(4조),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이하 5조), 양육 설계 등 상담 및 교육, 출산육아용품 대여 등 지원, 보호출산 지원 등을 명시했다.

임 의원은 '시행령이 아직 없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법 시행까지 입법 공백이 발생한다"며 조례 제정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조례 가결로 강원도는 특별법 시행에 앞서 강원도가 위기 임산부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설화 lofi@kado.net

2024년 02월 15일 (목)

전국 지방자치 뉴스

강원

임미선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위기임산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가 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위기임산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신부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위기임산부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 위기임산부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 양육 설계 등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사업, 출산육아용품 대여 등 양육 지원 사업, 보호출산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보호출산 지원 사업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신부가 불가피한 경우 자신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언된 것이다.

기획행정위원회 임미선 의원(사진)은 “출생통보제와 병행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도를 대비하여 제정되는 조례만큼 위기 상황에 빠진 많은 임신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출산과 양육에 곤란을 겪는 임신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저출산 등 인구 감소에 대한 하나의 대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호 기자 it8815@naver.com

문화매일, 더코리아 등 31개 언론사 보도

문화매일

2024년 02월 15일 (목)

정치

조성운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기관 내 화장실 불법촬영 근절 대책 마련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발의

이등원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의원

[문화매일신문=이등원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의원(국민의힘, 삼척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가 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경찰청 등과 협력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기관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비롯한 교육기관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불법 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불법 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포함한 실태조사 실시 ▷불법 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 등 발견 시 신고체계 마련 ▷교육 및 홍보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조성운 의원(사진)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교육기관 내 불법촬영 행위를 뿌리 뽑아 학생과 교직원들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02월 15일 (목)

신한뉴스

지역

조성운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기관 내 화장실 불법촬영 근절 대책 마련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발의

고태우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의원(국민의힘, 삼척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가 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경찰청 등과 협력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기관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비롯한 교육기관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불법 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불법 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포함한 실태조사 실시 ▷불법 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 등 발견 시 신고체계 마련 ▷교육 및 홍보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조성운 의원(사진)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교육기관 내 불법촬영 행위를 뿌리 뽑아 학생과 교직원들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이슈, 뉴스쉐어 등 26개 언론사 보도

2024년 02월 15일 (목)

강원종합뉴스

정치

[정치 이한영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 업무보고 받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에 따른 실질적 성과 위해 노력 당부
전통시장의 어려움 공감, 근본적 해결 위한 방안 당부

손기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 힘·태백1)은 15일, 강원도의회 제325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제국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의원은 업무보고를 통해 어려운 경기로 어느 때보다 경제에 힘을 쏟아야 하는 시기에 경제국의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점에 우려를 표하며, 더욱 내실 있고 실효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 이한영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 업무보고 받고 있다. © 손기택 기자

이 의원은 경제국 산하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살피며 지난해 통·폐합된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재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제진흥원은 원주시에, 일자리재단이 담당했던 사업 부서는 춘천시에 각각 위치하며 운영되는 등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의 목적이 퇴색되고 단지 행정적 의미의 통합에 그치지 않도록 도민이 실감할 수 있는 비전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어려워진 경제 상황만큼 출자기관인 (주)강원수출이 해외에서 요구하는 강원도만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변화를 부탁했다.

한편,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서 국비 16억 원을 확보한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전통시장을 통한 지역 경제에 활기가 찾아오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통시장에 투입한 예산에 비해 지역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에는 아쉬움을 나타내며, 이벤트성이 아닌 본질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원인부터 분석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원종합뉴스 편집국 손기택 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16일 (금)

지역 15면

영월군의회 의정활동비 공청회 ‘인상 가닥’

“단계적 인상” 의견도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월군의정비심의회(위원장 안태섭)는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신성식세경대 교수는 발표를 통해 “20년간 월 110만원으로 동결돼온 만큼 40만원 인상이 타당하다”며 “이는 단순한 활동비 상향이 아니라 군정을 더 살피고 활동을 더 많이 해달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또 김영복리플레이스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도 “군민의 일꾼인 군의원도의정활동에 전념하면서 청렴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불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영월읍 덕포리 A씨는 “공무



영월군의회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에서 한 주민이 단계적인 인상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원 봉급 등도 동결됐다”며 “일률적이기 보다는 단계적인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태섭 위원장은 “월 150만원 상한의 인상은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오는 21일 열릴 예정인 제2차 영월군의정비심의회에서 최종 인상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준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16일 (금)

지역 10면

춘천시의원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 상향 확정

춘천시의원 의정활동비가 기존 월 11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춘천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5일 오전 제33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갖고 신성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월 110만원씩 지급해오던 춘천시의원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정활동비

가 인상된 만큼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다짐도 나왔다. 정경옥 위원장은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시민들도 있는 만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시민들에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오세현

江原日報

2024년 02월 16일 (금)

지역 21면

영월군의원 의정활동비 40만원 인상 전망

군심의위 주민공청회

21일 2차 회의서 결정

【영월】영월군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가 최소 4,587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영월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15일 군청에서 올해부터 2026년까지의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의정활동비 현실화와 군의 재정자주도 증가 등을 이유로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원에서 40만원 늘어난 150만원으로 책정하자는 의견

이 도출됐다.

발표자로 나선 신성식 세경대 교수는 “의정활동비는 지난 20년 동안 물가 상승률 반영 없이 월 110만원에 묶여 있었다”며 “의정활동비는 단순한 활동비가 아니라 의원들에 대한 정당성을 보장하고 활동을 늘려달라는 취지로 봐야 하기 때문에 최근 개정된 지급 범위에 따라 40만원 상향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군청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최종 의정활동비의 인상 여부 및 지급 범위 등을 심의 및 결정할 예정이다. 오윤석기자

江原日報

2024년 02월 16일 (금)

지역 22면

화천군 외국인 근로자 343명 투입

결혼이주여성 친척들로 구성 내달부터 순차 배정

높은 숙련도·안정적 보수... 농가·근로자 모두 호평

【화천】화천군이 영농철을 앞두고 343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는 등 안정적인 농촌 인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군은 이르면 올 3월부터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 및 배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법무부로부터 올해 외

국인 계절근로자 343명을 배정받았다. 이들은 화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본국 4촌 이내 친척들이다.

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안정적 근로 조건과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 보장, 그리운 가족과 재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혼이주여성들과 근로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계절근로자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숙련도가 높고 국내 인력에 비해 인건비 부담이 덜해 지역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크다.

이에 도입 첫해인 2017년 38명에 그쳤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2년 176명, 2023년 257명, 올해 343명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해 군농업인단체협의회

를 농업인력지원센터로 지정, 운영을 지원한다.

지원센터는 농가와 유류인력 간의 중개, 구인 및 구직 상담, 농작업 교육까지 담당하게 된다. 또 취약 농가에 우선 영농작업반 등 인력을 지원하고, 유관 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농촌 일손돕기 활동도 진행한다.

최문순 군수는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영기자

江原日報

2024년 02월 16일 (금)

지역 17면

횡성지역 건설업체 활로 모색

군전문건설협 임원 간담회
기업 애로사항 수렴 등 진행

【횡성】건축 재정 운용에 따른
횡성지역 건설업체의 활로를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횡성군과 횡성군전문건설협
회는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김명기 군수, 김형진 부군수를
비롯한 군청 유관 부서장이 참

석한 가운데 ‘횡성군전문건설
협회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세수 감소에
따른 정부의 초긴축 재정 운용
기조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 물
량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중소 건설업체들의 애로 사
항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타개
책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까지 김형진 부군수를 단장으

로 하는 합동 측량설계단을 운
영해 200억원 규모 건설사업
에 대한 설계를 마쳤다.

또 겨울철 공사 중지 해제와
주요 사업이 본격적으로 발주
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적
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
기 발주를 준비 중이다.

김형진 부군수는 “군과 협회
가 소통을 통해 어려움을 해쳐
나가자”고 말했다. 유학렬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16일 (금)

지역 17면

고성주민 민통선 영농지 출입 불편 대책 촉구

“농사 중 2~30분 검문 시간낭비”
검문소 이전·민통선 재지정 요구
22사단 “주민 협력해 문제 해결”
군 “요구사항 정부 건의 지속”



고성 현내면 마달리 직골천 다리 앞에 군부대가 지난해 설치한 바리케이드, 다리 건
너편에 CCTV가 있다.

고성 최북단 명파·배봉·마달·화곡
리 등 4개 마을 주민들이 군부대 측에
민통선 영농지 출입과 관련해 근본적
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4개 마을 이장들은 “민간인통제선
이 군사분계선의 이남 10km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는 만큼 국방부에서
고성 최북단 민통선을 북상하는 등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민통선 영농출입 관련 민간군실
무회의’가 지난 14일 현내면 행정복
지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
는 고성군청, 22사단 관계자, 명파·

배봉·마달·화곡리 이장 등이 참석했
다. 유병길 마달리 이장은 “주민들이
건달리 영농지로 출입할 경우 마달리
포대 검문소에서 20~30분이 소요되
는데, 시간 낭비를 없애기 위해 검문
소를 건달리 마지막 영농지 위쪽으로
옮겨야 한다”며 “검문소에서 건달리
마지막 영농지까지는 7km 정도로
100필지, 3만여 평의 농지가 있어 영
농철에는 수시로 드나들며 농사를 지
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마달리 직

골천 옆에 세워진 CCTV와 바리케이
드도 마을 북서쪽 끝으로 옮겨져야
한다”며 “적골천과 절골천의 CCTV
와 바리케이드 너머에는 각각 2가구
와 1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출입이 매
우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김조국 배봉리 이장은 “군부대의
요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고 출입증
을 발급받아 절차를 통해 출입해 영
농활동을 하는 와중에 신분증을 다시
요청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내

마을, 내 삶의 터전에서 마음 편히 농
사짓고 살 수 있도록 민통선 재지정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
다”고 호소했다.

22사단 관계자는 “CCTV와 바리
케이드는 주민들의 안전과 군사작전
을 위한 조치일 뿐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의도는 없다”며 “앞으
로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 협
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
다. 군청 관계자는 “영농 불편함 등의
해결 방안으로 민통선 북상, 재지정,
탄력적 운영 등 최북단 주민들의 요
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
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해 11월 명파
리에 2억5000만원을 들여 비대면 무
선 인식 출입 시스템(RFID)을 구축
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출입
절차가 간편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
을 얻고 있다. 지산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16일 (금)

종합 04면

늘봄교실 운영 코앞인데…기간제 교사 미충원 불만 속출

도교육청 133곳→84곳 축소

원주·춘천 등 지원 미달 재공고
업무부담 과중 지자체 이관 촉구

속보=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초등 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늘봄학교를 올해 1학기부터 시행(본지 2월6일자 4면)하는 가운데 강원도내 일부 지역에서 기간제 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호소, 교육계가 우려했던 '늘봄교실 전담 기간제 교사 미충원'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망이다.

15일 본지 취재결과 올해 강원지역에서는 84개 초교에서 늘봄교실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당초 도교육청이 밝혔던 133곳에 비해 49곳이 줄어든 숫자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23곳으로 가장 많고, 춘천 18곳, 강릉 13곳, 속초·양양 7곳, 동해 5곳 등이다.

도교육청이 당초 계획보다 늘봄학교를 축소해 운영하는 이유는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 T.O를 도교육청 희망보다 적게 내려줬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곳에서까지 강행할 수는 없다"면서 "인력에 맞춰 학교를 정하다 보니 84교로 줄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교원단체가 우려했던 '기간제 교사 미충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기간제 교사 23명이 배정된 원주는 최근 원서접수 마감결과 17명이 지원해 미달됐다. 이마저도 지난 14일 면접에는 12명만이 참석, 전원 합격하더라도 11명을 추가로 뽑아야 한다. 16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하는 춘천도 마감을 하루 앞둔 15일(오전 기준)까지 5명이 원서를 내는데 그쳤다.

도교육청은 미충원 인력에 대해서는 재공고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당장 다음달부터 늘봄학교가 시행되는 가운데 아직도 담당 인력이 확정되지 않아 일선 학교에서는 불만과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춘천의 한 초교에 근무 중인 A씨는 "학기가 시작되면 전담인력이 온다고 하는데, 그전까지의 모든 준비는 기존 교사가 다 해야 한다. 업무 부담을 주지 않겠다더니 사실과 다른 것 같다"고 했다. 원주지역 초등교사 B씨도 "여전히 업무를 학교에서 진행하는데, 이게 정

말 업무경감이 맞는지 모르겠다. 정말로 교사들을 늘봄에서 배제해 주려면 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불만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늘봄학교와 현장 교사 간 업무 분리 시점은 2월이 아닌 3월"이라며 "현장 교사들에게 불만을 먼저 생각해달라. 당장 학생들은 3월부터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업무를 나몰라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민영

江原日報

2024년 02월 16일 (금)

종합 02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마련…새 국회 1호 법안 노린다

70개 과제 114개 조문 교육도시·기업 상속세 감면 등 담아
특례별 공론화 포럼 돌입…연내 개정 목표 4월까지 정부 협의

강원특별자치도가 4·10 총선 이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초안을 완성했다. 총 70개 과제 114개 조문으로 이뤄진 3차 개정안은 조세 감면과 석탄경석 자원화, 항만공사, 과학기술원 설립 등 신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강원자치도의 실질적 특례를 담은 3차 개정안의 면면을 살펴본다.

■첨단·특화산업 육성=강원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실현을 위한 산업 육성 특례는 29개 과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중심병원,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지정·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대마를 의료·산업용으로 활용하는 특례 도입도 추진한다.

수소특화단지를 자체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한다. 바이오헬스와 수소 등 강원자치도에 특화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배가한다는 계획이다. 폐광지역의 경우 석탄경석 자원화, 텅스텐 등 핵심광물 산업화, 광해방지사업 지원, 석회석 폐광지 개발사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책을 입법화한다. 강원랜드의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제외, 영업 규제 완화 등의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

강원권항만공사 설립, 무역항의 국제선박 등록 특구 지정, 외국인 체류요건 완화, 강원자치도에 한정된 이민 비

자신설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교육도시 지정·기업 상속세 감면=2차 개정 당시 불발됐던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국제학교 설립은 3차 개정을 통해 재도전한다.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제2부교육감 도입, 9년제 초·중 통합학교 설립 권한도 추진한다. 부지사의 수를 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도내 주요 특구 및 지구에 대한 조례 감면시 지방교부세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강원지역 카지노 사업자 납부금과 카지노 개별 소비세, 도내 공항과 항만의 출국납부금 등을 재원으로 삼아 강원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하는 특례도 추진 중이다. 전국 첫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강원특별법에 지정한 특구와 지구 등의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안도 담고 있다.

■연내 입법 완료 목표=강원자치도는 올 5월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제1호 법안으로 발의, 연내 개정을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4월까지 국무조정실 특별자치도지원위를 통해 부처 협의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15일부터는 강원연구원과 함께 특례별로 공론화 포럼을 연다. 도 관계자는 "3차 개정을 통해 내실 있는 구체적 특례들을 입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16일 (금)

지역 10면

춘천시 강촌 지역특화재생 옛 명성 되찾는다

시, 9월 도시재생 신청 계획
선정시 4년간 150억원 지원
내달 주민간담회 방향 설정
지역자원 활용 활성화 총력

춘천시가 강촌 일대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침체된 마을을 살리겠다는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15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는 강촌 일대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시가 검토 중인 지원 유형은 지역특화재생이다.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해 도시를 브랜드로 만들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4년 간 15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내달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방향과 세부 계획 등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사업 시행 시기를 고려했을 때 도시재생사업 신청 시기는 이르면 오는 9월쯤이 될 전망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강촌 일대 일부

지역이 도시로 지정돼 있어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하다”며 “현재로서는 추진하기로 정해진 정도이고 구체적인 도시재생의 방향이나 사업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춘천시가 도시재생사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강촌 일대가 활성화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강촌은 대표적인 MT명소로 전국 대학생들이 집결했지만 2000년대 들어 쇠퇴, 이후이렇다 할 회생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 차원에서도 강우현 전남이섬 대표를 초청, 공방을 만드

는 등 대책을 찾아봤지만 아직도 옛 명성을 회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지역사회의 평가다. 피암터널을 활용한 문화축제, 캠핑촌 등 강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지역 차원에서 거론돼 왔다.

이희자 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강촌이 갖고 있는 옛 추억은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한다”며 “주민들도 마을을 살리자는 일념 아래 하나로 뭉쳐야 한다.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세현

江原日報

2024년 02월 16일 (금)

지역 20면

태백시 ‘일자리·인구 절벽’ 가속화

【태백】강원관광대 폐교와 올 6월 장성광업소 폐광을 앞두고 태백지역 일자리 부족 및 인구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태백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3년 4분기 태백지역 경제동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태백시 인구는 전년 동기 대비 1.8% 줄어든 3만8,702명에 그쳤다.

전년비 인구 1.8%·구인 수 18.3% 감소

강원관광대 폐교·폐광 앞두고 대책 시급

또 같은 기간 지역 내 구인 수는 295명으로 전년에 비해 18.3%나 줄었다. 구직 희망자 수는 전년보다 19.3% 늘어난 743명으로 집계됐다.

태백상의는 이 같은 인구 및

구인 수 감소의 원인으로 석탄 공사 인원 감축과 대체산업 부재, 구직난, 지역 경기 침체 등을 꼽고 있다.

문제는 지역 내 물가와 대출 의존도는 점차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말 태백지역 소비자 물가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9.2%에 달했다. 이 중 가공식품류(8.2%), 선어·과일류(24%), 채소·양념류(18.3%)가 크게 올랐다. 또 제1금융기관의 예금잔액은 9,659억7,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다.

다행히 관광객 규모는 몸집

을 키웠다. 다양한 축제와 스포츠 대회에 방문객들의 발길이 쏠리며 지난해 4분기 관광객 수는 전년보다 2.1% 많은 10만2,569명으로 조사됐다.

태백상의의 관계자는 “교통·주거·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정주인구의 유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광희기자

2024년 02월 16일 (금)

江原日報

사회 05면

‘24cm 폭설’ 도로 항공편 마비·교통사고

15일 산지와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리면서 도로 통제와 교통운행 중단이 잇따랐다.

이날 적설량은 고성 진부령이 24.6cm로 가장 많았고, 인제 조침령이 19.2cm로 뒤를 이었다. 양구 해안에는 15.9cm, 양양 영덕에는 13.8cm의 눈이 쌓였다.

강릉 시내에도 14.1cm의 눈이 쌓이면서 강릉시 왕산면 안반데기길 구간은 전면 통제됐다.

고성은 14.4cm의 적설량을 기록하며 델피노 입구에서 미시령정상의 6.6km의 군도가 전면 통제됐고, 8호선 미시령옛길도 통제됐다. 간성읍 진부령 정상~흘리구간의 마을버스도 운행을 멈춘 상태다. 또 양양군 현북면 양양고속도로 강릉방향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4명이 병원으로 이

영동·산간지역 고갯길 통제
춘천 80명 버스에 고립 구조

오늘 눈 그치고 ‘반짝 추위’
출근길 빙판 안전 주의해야

송됐다. 춘천시 북산면 청평사 인근 오르막길에서는 80명의 승객을 태운 버스 2대가 눈길에 고립,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폭설과 기상악화로 인해 일부 도로와 항공편이 마비되기도 했다. 이날 원주공항의 제주행 항공편 4편 중 2편(출발 1편, 도착 1편)이 결항됐다. 춘천 사북면 이도 201호 말고개, 원주 군도 8호선 배재고개, 영월 군도 15호, 고성 미시령옛길 고성~인제 구간이 상시 통제되고 있다.

이 밖에도 강릉, 홍천, 인제, 양양 등 4개 지역의 시내·마을버스 노선 22개가 단축 및 우회 운행됐다. 국립공원 탐방로 55곳(태백산 21곳, 치악산 14곳, 설악산 13곳, 오대산 7곳)의 출입도 차단됐다.

16일 눈은 그치겠으나 반짝 추위가 시작되면서 교통안전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강원지방기상청은 “기온이 차차 영하로 떨어지면서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빙판길로 변하는 곳이 많겠다”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저속 운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춘천 영하 5도, 강릉 영하 3도까지 내려가겠고, 낮 최고기온은 영상 1도에서 8도까지 오르겠다.

박서화·김준겸·최영재·김철열기자

2024년 02월 16일 (금)

종합 01면

강원도민일보

봄 날씨 하루만에 폭설...진부령 27.4cm·속초 1.9cm

강원도 재대본 비상1단계 가동
내일까지 도내 대부분 영하권

봄날씨가 하루아침에 폭설로 변했다. 강원도내 대부분 지역에 대설 특보가 내려지면서 산지와 영동을 중심으로 20cm 이상의 눈이 내렸다.

15일 강원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누적 적설량은 진부령 27.4cm·속초(설악동) 21.9cm·향로봉 21cm·고성(간성) 17.6cm·양양(영덕) 15.4cm·북강릉 15cm 등이다.

많은 눈이 내리자 강원도는 재대본 비상1단계를 가동해 국립공원 20곳을 통제하고, 제설장비 790대와 인력 971명, 제설제 607t을 투입해 제설 작업에

나섰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이날 동해안 대설로 인한 항포구 및 정박어선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항포구 점검 및 순찰 강화에 나섰고,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전 10시부터 유니목과 덤프 등 가능한 중장비를 총동원해 한계령과 마을길 등에 대해 제설 작업을 진행했다.

최근 낮 최고기온이 21도까지 오르는 등 봄날씨를 보였지만 오는 17일까지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는 등 급격한 기온변화가 나타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서 -7~-2도, 산지 -11~-8도, 영동 -5~-1도며, 낮 최고기온은 영서 5~8도, 산지 1~3도, 영동 5~7도로 예보됐다.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서 -6~-2

도, 산지 -7~-4도, 영동 -1~1도, 낮 최고기온은 영서 8~12도, 산지 6~9도, 영동 9~13도를 보이겠다.

강원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최훈·지산·신재훈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16일 (금)

사설/칼럼 19면

외국인 정주 정책 고민할 때

-정책 거버넌스·교육등 인프라 구축 절실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강원지역 장기 체류 외국인이 2만4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강원 청년들의 타지역 유출로 발생한 인력난을 해소하며, 지역 경제 기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정주할 여건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강원 이탈 조짐까지 보입니다.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과 함께, 외국인 지역 주민화의 관점에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이 새롭게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정주화 논의는 최근 본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도여성가족연구원과 공동 개최한 '강원특별자치도 이주 노동자와 지역사회 상생 포럼'에서 본격화했습니다. 핵심은 외국인 지원을 통해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공동체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민청 설립 등 정부의 이민 정책 변화에 맞춰, 시장 경제와 인권, 문화 다양성 등을 감안한 대안이 강조됐습니다.

이런 논의는 외국인 노동자들마저 탈강원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루어져 시선을 끌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인구감소 대응 정책 일환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 유입에 나섰지만, 정작 강원에서 사는 외국인 4명 중 1명은 '탈 강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주노동자

4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인구 유입을 위한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도 내거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4.8%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거주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직장 생활과 여가생활 불만족, 교통 생활, 지원 정책 미비 등이 꼽혔습니다.

포럼에서는 이주민 정책에 반영할 만한 다양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일자리 박람회 개최와 강원 이주-다양성 포럼 출범, 이민정책 연구네트워크 참여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지자체마다 이민정책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지역단위 이주 정책 거버넌스를 갖춰야 한다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외국인력 정책 관점을 유입·체류에서 이민정책으로 확장해 노동 중심이 아닌 사회적 통합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외국인 정주 대책과 이민은 정부의 기본 정책과 함께 진행돼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정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국인들이 강원도에서 안정적으로 노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과 체류 외국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애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우선해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16일 (금)

사설/칼럼 19면

역대급 임금체불, 노동자 희생 안돼

-고용노동부 전문인력 확대상시 근로감독 실효내야

2023년도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악이라는 나쁜 소식이 나왔습니다. 2022년보다 무려 32.5%가 급증해 전국적으로 임금체불 총액은 1조7845억여원에 달합니다. 2019년 1조7217억원으로 최고였다가 2020년과 2021년 1조5830억원, 1조3504억원으로 내려갔으며 감소 추세였던 것이 2022년 다소 늘었고 2023년 들어 눈에 띄게 치솟은 것입니다.

강원지역 체불임금액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더 높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23년 말까지의 임금체불액이 6965명 42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도 292억원에 비해 무려 45.4%나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역시 1187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만큼 더 많은 노동자가 고통을 치르고 있습니다.

강원지청 측은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액 청산 캠페인 및 현장 지도에 나서며 활동했으나, 2월 7일 속초 대포항의 신축 호텔 15층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고공 시위를 벌이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4시간여 칼바람을 맞으며 목숨을 건 시위를 벌인 이들은 건설업 노동자 60여명이 임금 5억여원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업체 측이 임금 지급을 합의하면서 고공 시위가 중단

되긴 했으나,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전까지도 이들이 처한 상황은 전혀 언론에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이런 위험한 시위 투쟁을 벌여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는 법에 취약한 건설업, 제조업, 인력업 등 분야의 노동자들입니다. 흥천의 한 인력업체 대표는 계약서상의 근로자와 다르다는 이유로 원청업체로부터 2300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고 그 고통은 업체를 통해 일한 노동자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1, 2개월 치만 임금이 밀려도 생활고를 겪어야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대개 임금체불은 30인 미만의 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어 실제 체불 문제가 적극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 우선'에 대한 인식이 박약한 사업주를 상대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관련 조치는 역대급 임금체불 사태를 막지 못한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패한 정책에 더 이상 기댈 수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을 확대해 상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금융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체불을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이 확고해야 억울한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江原日報

2024년 02월 16일 (금)

사설/칼럼 25면

이사철 전세난 우려, 근본 대책 마련돼야 한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매물 부족과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난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전셋값 오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4일 기준 도내 아파트 전세 매물은 1,991건으로 1년 전(3,117건)에 비해 36.2% 급감했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1,384건에서 463건으로 66.6% 줄었다. 이어 춘천(-47.1%), 동해(-29.4%), 속초(-19.1%) 등에서도 매물이 크게 감소했다. 전세 매물이 격감하면서 전세가격은 뛰고 있다. 실제 2023년 12월 기준 도내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100(2021년 6월=100)으로 5개월 연속 전월 대비 상승세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 수급 불균형으로 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국적으로도 심상치 않다. 한국부동산원의 발표를 보면 2023년 12월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66.8%로 지난해 2월(66.9%) 이후 10개월 만에 정점을 찍었다.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2018년 1월 75.2%로 2012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뒤 2023년 8월 66.1%까지 떨어졌다. 이후 전셋값은 오름세로 전환됐고 매매가는 둔화 내지 하락하면서 전세

가율은 4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전세가율이 높아진 것은 고금리의 장기화 및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실수요자들이 부동산 매수 대신 전세로 눈을 돌린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입주 물량이 줄어든 것도 전세 매물 부족에 따른 전세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사철을 맞아 당장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매물을 찾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전셋값이 가파르게 치솟는 것은 전세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전세난은 단순히 이사철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따라서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셋값은 이사철에 관계없이 고공 행진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주택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주거 부담을 키우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전세난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전세 대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정부의 대처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전세난은 집 없는 서민들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과 전세시장 등을 면밀하게 살펴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江原日報

2024년 02월 16일 (금)

사설/칼럼 25면

‘도 한국은행 춘천 유치전’ 참여하게 이슈화해야

한국은행 춘천 유치가 향후 어떻게 될지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은행 춘천 유치 문제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즉,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산은법에 ‘본점을 서울로 한다’는 한 줄짜리 규정이 있는데 그것만 ‘부산으로 한다’로 고쳐도 되고, 규정 자체를 없애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산은법 개정으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도 지방 이전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한국은행 춘천 유치를 1순위로 관광, 국방·안보, 건강·의료 분야 등 총 32개 공공기관을 유치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쯤 이 문제는 참여하게 이슈화돼야 한다. 특히 총선이 다가오는 선거철이기에 그렇다. 중앙당뿐만 아니라 여야 각 정당의 도당(道黨)은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민심의 지지를 통해 정치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정치인들로서는 지역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정치권이 민심을 얻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약에 반영하려는 노력의 일단이라는 점에서

도 긍정적이며 정치 행위의 중요한 과정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한국은행 춘천 유치 계획이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서 지역에서 지금까지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질 리 없다. 한국은행 춘천 유치를 위해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은 어떤 정책적 대안으로 풀어 나갈 것인지, 정치세가 약한 강원특별자치도로서는 ‘한국은행 본점은 서울에 둔다’는 한은법을 무슨 수로 개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직원들의 반발에 대한

대책 등이 충분히 공론화돼야 한다. 그래야 총선을 치러야 하는 각 정당이나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정책 대결을 펼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행 춘천 유치는 현실적으로 접근될 수 있다.

이제 총선을 앞둔 지역사회의 역할은 자명하다. 지역의 현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총선 주자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약화하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이 낙후지역이 된 원인은 정책적 소외 말고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주민을 위한 수질 보호, 백두대간보호법 등은 그 환경을 지키기 위해 주민이 희생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또 낙후지역의 대명사가 된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묶여 개발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물론 강원인들 스스로 총선 주자 못지않게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윤 대통령,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추진에
김 지사 1호 공약 한은 춘천 유치 문제 주목”
한은법 개정·직원 반발 등 현실적 난제 산적